

---

# 2021년도 반부패·청렴대책 추진계획

## - Clean Ocean 실천계획 -

---

2021. 5.



해양수산부

[감사관실]

# 2021년도 반부패·청렴대책(Clean Ocean) 추진계획(요약)

## □ 기본방향

- 4대 추진전략, 15개 추진과제(37개 세부 추진과제) 수립·시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, 깨끗한 해양수산행정 구현

### '21년 비전과 목표

####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해양수산행정 구현

\* (부패방지시책) 1등급(최우수) 유지 / (청렴도) 2등급(우수) 도약

\*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핵심과제 위주 반부패시책 수립

## □ 중점 추진사항

- 청렴생태계 조성 (☞ 청렴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시스템 구축운영)
  - ① 고위직 반부패 의지 제고, ② 청렴행정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 운영, ③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
-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(☞ 취약분야 개선으로 부패행위 사전 예방)
  - ④ 부패취약분야 개선, ⑤ 반부패·청렴교육 실효성 제고, ⑥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, ⑦ 공공재정 환수제도 안정적 정착, ⑧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예방 및 엄정처리
- 청렴시책 성과 확산 (☞ 다양한 반부패 과제 추진으로 청렴시책 성과 확산)
  - ⑨ 반부패 시책 효과성 제고, ⑩ 반부패 중점 과제 추진, ⑪ 청렴문화 확산 활동 강화, ⑫ 반부패 정보 공개 활성화, ⑬ 소속 및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추진
- 부패방지제도 운영 (☞ 부패신고자 보호 등으로 신고 제도 활성화 유도)
  - ⑭ 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준수, ⑮ 부패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 철저

## □ 향후계획

- '21년도 우리부 반부패·청렴(Clean Ocean) 대책 소속기관(22개) 시달, 소속기관별 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·이행토록 조치



## 목 차



I. 반부패청렴 정책 환경 및 여건 .....	1
II. 2020년 성과 및 반성 .....	2
III. 2021년 비전 및 추진전략 .....	5
IV. 중점 추진과제 .....	6
1. 청렴 생태계 조성 .....	6
2.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.....	8
3. 청렴시책 성과 확산 .....	12
4. 부패방지 제도 운영 .....	16
V. 행정사항 .....	17

# I. 반부패청렴 정책 환경 및 여건

## □ 대외 환경

- 국제투명성기구(TI)가 발표한 '20년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(CIP)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180개국 중에서 33위로 역대('95~) 최고기록
- 그러나, OECD국가 평균점수인 66.9점보다는 5.9점이 낮은 수준으로 전체 36개국 중 23위로 주요 선진국과는 격차 존재

## □ 우리부 청렴수준

- (청렴도 평가) 외부평가 개선(0.79점↑)으로 종합청렴도는 전년보다 상승(4→3등급)하였으나 내부직원 평가점수는 오히려 하락(0.17점↓)
  - 취약분야로 분석된 조직문화, 예산집행 등 개선대책 마련 필요
  - (시책 평가) 중앙행정기관 I 유형(24개, 부·처·위원회) 중 '20년도 우리부는 '19년도 3등급에서 2등급 상승한 1등급(최우수)으로 평가
  - 평가과제(7) 대부분이 우수로 평가되었으나, 1등급 지속유지를 위해서 권익위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부 미비점\* 보완추진 필요
- \* 시책의 내실화 및 도전성 부족, 고위직 주도 상설적·체계적 추진체계 필요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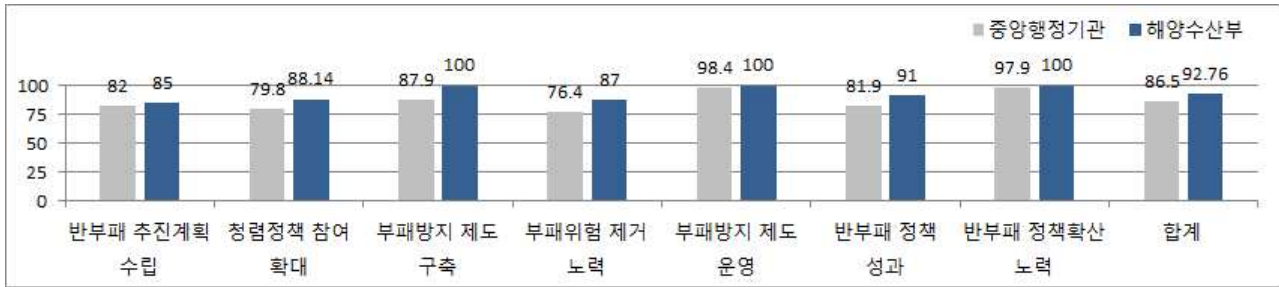
## □ 해양수산 정책여건

해양수산 정책여건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시책평가 1등급(최우수) 선정('17·'20) 등 평가 노하우 및 능력 보유</li><li>▶ 기관장·고위직의 강한 청렴 의지 및 노력</li></ul>	강점	약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각종 인·허가 업무로 인한 부패 개연성 상존</li><li>▶ 다양한 업무 형태에 따른 부패 사각지대 발생</li>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공직사회 청렴 향상에 대한 국민 관심 및 요구 증가</li><li>▶ 공공기관 청렴수준도 꾸준히 개선</li></ul>	기회	위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지속적인 부패행위 발생</li><li>▶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청렴도 점수 하락</li></ul>

☞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해양수산행정 구현을 위해 '20년 취약분야 개선사항을 반영한 반부패·청렴대책 수립·시행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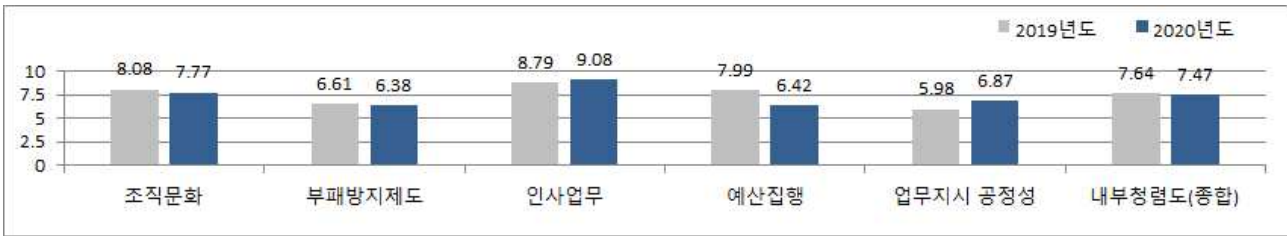
## II. 2020년 성과 및 반성

- ('20년 성과)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단위과제(7)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점수(86.50점)보다 6.26점 높은 92.76점을 받아 1등급(최우수)으로 평가



- (반부패 추진계획 수립) 국정과제, 공정성 제고 등 4대 중점분야 14개 과제에 대해 구체적·합리적 추진계획 수립 및 모두 이행 완료
- (청렴정책 참여 확대) 실·국 및 소속기관별 중점 실천과제(본부 11, 소속 50건) 선정·추진, 장관주재 보고회(4.6) 및 이행점검(7·9월)
  - 장관 청렴서한문 발송(2.14), 고위직(39명) 청렴도 자가진단(6.8~6.19), 청렴시민 참여제도 적극 운영(회의·교류활동 3회, 개선·권고사항 수용 4건 등)
- (부패방지 제도 구축) 상품권 구매·사용 투명성 제고, 국가전문자격증 대여·알선행위 제재강화 등 권익위 권고과제 20건 모두 조치 완료
- (부패위험 제거 노력) 취약분야인 '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' 부패방지대책\* 추진으로 권익위 청렴도 평가점수 크게 개선(5.16→9.22점)
  - \* 재량행위 차단 등 항만법시행령 개정(7.28), 부패신고센터 운영 및 민원 면담일지 작성 등
- (부패방지 제도 운영) 고위공직자 반부패·청렴교육 이수률 97.6%, 청렴교육 강사 11명 양성으로 만점(100점) 취득
- (반부패 정책성과) 권익위 측정기관 종합청렴도 개선(4→3등급) 등
- (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) 불법 및 무자격 어선중개 근절을 위한 어선 거래 신고절차 마련(9.25)으로 공정·투명한 어선거래 환경 조성 등

- ('20년 반성)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내부청렴도 점수가 전년대비 소폭 하락(7.64→7.47점)하였고,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일부과제는 보완하거나 개선 필요



- (내부청렴도) 조직문화, 부패방지제도, 예산집행 항목 하락으로 내부청렴도 전체가 하락함(0.17↓). 특히, 예산집행 항목은 위법·부당집행 경험 등의 답변으로 전년대비 점수가 크게 하락(7.99→6.42)
- ⇒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청렴의식 내재화 노력을 지속하고, 예산의 위법·부당집행 근절방안 및 투명성 제고 추진
- (부패방지 시책) 권익위 평가결과, 추진계획의 내실화 및 도전성 부족, 고위직 주도 상설적·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필요, 내·외부 구성원의 의견·체감도 제시 등 자체 평가 보장 등 의견 제시
- ⇒ 내부직원·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혁신적인 도전과제 발굴, 차관 주재 '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기획단'을 구성 및 주기적 이행점검 실시
- ⇒ '자체 청렴도 측정'시 내부직원 및 정책고객 등에게 우리부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·체감도, 효과성을 추가하여 조사 실시 등

## □ 정책추진 방향

- 권익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리부 부패요인 및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 관리 및 점검, 개선 추진
- '21년도 권익위 '반부패 청렴정책'의 기본 방향, 중점 추진과제 등 기조를 반영하여 우리부 실정에 맞게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 추진
- 우리부 업무특성을 고려, 민원 및 지도·단속 부서의 부패 요소, 학연·지연 등이 부패 연결고리 등을 집중 관리하여 반부패시책 효과성 제고

## < 「'21년도 반부패 청렴대책」 주요 추진내용 >

### □ 신규 도입

- ① (상설·체계적 추진체계 신설) 「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기획단(차관주재)」 및 「청렴길잡이단(감사담당관 주재)」 상설 운영  
 \* 권익위 평가에서 청렴업무 추진체계를 상설적·체계적 방식으로 개선의견 제시
- ② (공공재정 환수제도 전담조직 신설)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안정적 정착,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담당조직 지정·운영
- ③ (청렴시책 효과성·체감도 조사 실시) 내부직원, 정책고객 등을 대상으로 우리부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·체감도, 효과성 설문 실시 등 자체 평가 보강  
 \* 권익위에서 내·외부 구성원의 의견이나 체감도를 제시 등 효과성 분석 권장
- ④ (처분 적정성 회의 신설) 감사처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「감사심의회」 개최 전 「처분적정성 검토회의」 신설
- ⑤ (청렴신호 등 신설) 내부망 이용 “청렴신호 등” 운영, 내부직원 대상 부패사건 발생, 공직기강 해이 등에 대한 경고신호 알림
- ⑥ (산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신설) 권익위 청렴도 측정대상이 아닌 산하 공공기관(8) 기관청렴도 제고를 위해 우리부에서 자체 청렴도 측정실시
- ⑦ (추진과제 분류체계 개선) 효율적인 이행 및 점검이 가능(권익위 권고사항 반영)

### □ 중점 추진사항

- ① (자체 중점 추진과제 추진) 실·국, 소속기관별 도전성·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 총49건(본부 14, 소속 34) 발굴하여 추진
- ② (청렴 옴부즈만 내실화) 해운물류·항만분야 외부전문가를 청렴옴부즈만으로 추가 위촉(4인→7인) 위촉하여 시민참여 제도 내실화 도모
- ③ (청렴도 취약분야 집중 개선) ‘20년도 청렴도가 하락한 ’항만시설 사용허가‘의 5개 지방청 청렴도 개선대책’을 벤치마킹하여 전 지방청(11)으로 확대 추진  
 \* 청렴신고센터 운영, 청렴서약서 징구, 복수 면담제도, 면담일지 작성,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
- ④ (사정기관 합동점검 및 지적사항 이행 등) 국무조정실(부패예방추진단), 범정부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(행안부 주관, 74개 기관 참여) 등과 합동점검, 지적사항 처분·개선 추진 등
- ⑤ (부패 취약분야 집중관리 등) 지도·단속부서, 학연·지연 등에 따른 부패 연결고리 집중 점검 및 우리부 정부혁신과제로 ‘공직 윤리강화’를 선정하여 공직사회 불공정 사례 집중개선 추진
- ⑥ (반부패 시책의 내실화 및 성과확산) 반부패 시책 수립 시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고위직(장·차관)의 주기적 이행점검 등으로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
- ⑦ (국민생활 속 불법·불공정 개선 등) 수산물 윤리적 소비, 낚시명예감시원(100명), 국민안전감독관(15명) 등 운영
- ⑧ (정부혁신 어벤저스 활동) 일하는 방식,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발굴, 세대간, 간부급과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(창의적·적극적인 5급이하 젊은 직원 13명)

### Ⅲ. 2021년 비전 및 추진전략

#### 비 전

“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해양수산행정 구현”

#### 2021년 반부패·청렴대책 목표

(부패방지시책) 1등급(최우수) 유지 / (청렴도) 2등급(우수) 도약

#### 추진전략(4개)

#### 추진과제(15개) - 세부추진과제(37)

##### 1. 청렴생태계 조성

- ① 고위직 반부패 의지 제고(4)
- ② 청렴행정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 운영(3)
- ③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(1)

##### 2.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

- ① 부패취약분야 개선(3)
- ② 반부패·청렴교육 실효성 제고(3)
- ③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(2)
- ④ 공공재정 환수제도 안정적 정착(3)
- 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 및 엄정처리(3)

##### 3. 청렴시책 성과 확산

- ① 반부패 시책 효과성 제고(4)
- ② 반부패 중점 과제 추진(3)
- ③ 청렴문화 확산 활동 강화(3)
- ④ 반부패 정보 공개 활성화(1)
- ⑤ 소속 및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추진(2)

##### 4. 부패방지제도 운영

- 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준수(1)
- ② 부패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 철저(1)



## IV. 중점 추진과제

### 1. 청렴생태계 조성

- ◆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제고 → 청렴실천 동력 강화
- ◆ 시민참여 제도 운영 → 국민적 시각으로 부패현안 감시 및 정책 개선
- ◆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→ 부패행위 사전 예방

#### 1]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제고

- (중점 추진과제 추진) 고위직 및 기관장이 반부패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청렴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·국 및 소속기관별로 부패방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
  - 장관 주재 중점 추진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기적(연 2회) 이행 현황 점검을 통해 청렴정책 추진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
- (상설·체계적 추진체계 신설) 차관(주재), 실·국장 참여 등 고위직 주도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「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기획단\*」 구성·운영
  - 「'21년도 반부패·청렴대책(안)」 심의 및 '21년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·관리(7월, 9월)
  - \* 차관(주재), 기획조정실장, 해양정책실장, 수산정책실장, 해운물류국장, 해사 안전국장, 항만국장, 대변인, 감사관 9명으로 구성·운영
  - \*\* 청렴시책 추진 실무지원을 위해 협의 T/F인 「청렴 길잡이단」 구성·운영(감사 담당관, 각 실국 4~5급 직원 6명 등)
- ☞ '20년도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('21.1.26) 우리부 청렴업무 추진체계를 상설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
- (고위직 청렴도 자가진단) 고위공무원의 청렴도를 자율 진단하고 솔선수범 유도를 위해 '고위직 부패위험성 자가 진단' 실시(5월)
- (장관 청렴서한) 장관의 청렴도 제고 의지가 일선 현장까지 전달 될 수 있도록 장관 명의 청렴서한문을 소속직원에게 발송(2월)

## ② 청렴행정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 운영

- (청렴옴부즈만 내실화) 해운물류·항만분야 외부전문가를 청렴옴부즈만으로 추가 위촉(4인\*→7인)하여 시민참여 제도 내실화 도모(4월)
  - \* 기존 청렴옴부즈만 위원은 해양·원양·수산·해사안전분야 전문가 4인('20.12. 기준)으로 구성
- (청렴옴부즈만 운영)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옴부즈만을 운영하여 그 권고에 따라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, 감사 등 추진(연 2회)
- (합동회의) 농축산식품부, 환경부 등 3개 기관과 합동으로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하여 우수사례·자료 공유 등 협력 강화(연 1회)

## ③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

- (반부패 제도개선)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, 제·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과제 등 반부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 조치
  - 권익위 평가대상 제도개선 권고과제는 권익위에 사전 검증절차를 거쳐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주기적 점검
- \* '21년 우리부 BSC 평가(기관청렴도)에 개선·권고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반영

### <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 일정 >

추진과제	세부 추진과제	추진 일정	주관부서	관련부서
1. 고위직 반부패 의지 제고	① 중점 추진과제 추진	연중	실·국, 소속기관	쑤 부서
	② 상설·체계적 추진체계 신설	연중	감사관	쑤 부서
	③ 고위직 청렴도 자가진단	5월	"	쑤 부서
	④ 장관 청렴서한	2월	"	쑤 부서
2. 청렴행정을 위한 시민참여제도 운영	① 청렴옴부즈만 내실화	4월	"	쑤 부서
	② 청렴옴부즈만 운영	연중	"	쑤 부서
	③ 합동회의(3개 부처)	7월	"	쑤 부서
3.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	① 반부패 제도개선	연중	소관부서, 감사관	쑤 부서

## 2.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

- ◆ 부패 취약분야 개선 → 우리부 청렴수준 향상
- ◆ 반부패·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→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
- ◆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→ 부패 자정능력 제고
- ◆ 공공재정 환수제도 안정적 정착 → 제도운영 책임성 강화 및 이행력 제고
- ◆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 및 엄정처리 →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

### 1 부패 취약분야 개선

- (청렴도 취약분야 집중 개선) 권익위 청렴도 평가점수가 하락한 '항만시설 사용허가'와 '예산집행' 업무에 대해 집중 관리 실시
  - (항만시설 사용허가) 청렴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방법 안내, 청렴서약서 징구, 복수 면담제도(2인) 도입, 면담일지 작성,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개선대책을 전 지방청(11개)으로 확대\* 추진
    - \* 청렴도 하락(9.53→7.38점)으로 5개 청(부산·울산·동해·목포·평택) 개선대책을 벤치마킹하여 전 지방청(11개)으로 확대·시행(자체실정에 맞게 추진) 및 소속기관 시책평가에 반영
  - (예산 집행) 예산배정 단계부터 목적에 맞게 엄격·집행하도록 내부지침 시달,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기 모니터링(매월) 및 공개(분기), 사업비 집행 전 일상감사 철저, 예산낭비·회계부정·보조금 집행실태 집중감사 실시 등
    - \* 예산의 위법·부당집행 경험률(7.96→6.99점), 경험빈도(9.31→7.85점), 경험규모(9.58→0점), 평가항목 전체가 '19년 대비 하락함(7.99→6.42점 1.57점↓)
- (사정기관 합동점검 및 지적사항 이행 등) 국무조정실 및 「법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」 등과 합동점검, 지적사항 처분·개선 추진 등
  - (해양수산 취약분야 점검) 국무조정실(부패예방추진단) 주관 합동점검\* 결과 지적사항(106건)에 대해 행정조치 83건(수사의뢰 5, 행정처분 78), 제도개선(19건) 및 제안사항(4건) 이행점검 및 조치(~'21.12월)
    - \* 항만·어항건설, 보조금, 어선감척, 해양환경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국조실(주관), 해수부, 해경청, 지자체 등과 3개 권역(부산·인천·목포) 합동점검 실시('20.7.15.~11.6.)

- (연안여객선 안전감찰) 「'21년도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\*」 안전 분야 부패근절 우리부 중점과제인 '연안여객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감찰'을 실시\*\*하고 행정처분,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이행(~'21.12월)

\* 행정안전부(주관), 중앙부처, 시·도, 공공기관 등 74개 기관 참여

\*\* 해수부(총괄), 지방청(해사안전감독관), 운항관리센터(운항관리자), 해경서, 검사기관 (KOMSA, KR)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

- (부패취약분야 집중관리 등) 우리부 업무·조직특성을 고려 취약 분야와 최근 공직사회 불공정 사례 등을 반영 내부통제 강화 추진

- (지도·단속부서, 학연·지연 등의 부패요인 점검) 원산지 및 불법 어업 지도·단속부서 등의 부패요소, 특정학교 및 특정지역 출신 등에 따른 부패 연결고리가 없는지 집중점검\* 실시

\* '21년 정기종합 감사시 업무특성, 학연·지연 등으로 인한 부패요인 집중점검

- (공직사회 불공정 사례 개선) '내부정보 이용 사익 추구' 등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'공직자 재산심사(4~9월)', '퇴직자 임의취업 일제 조사(4월, 10월)' 등 실시

\* '21년도 우리부 정부혁신 실행과제로 '공직자 윤리강화'를 선정('21.4.)하여 지속적으로 점검·관리 추진

## 2 반부패·청렴교육 실효성 제고

- (고위급 교육) 우리부(본부·소속기관)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「청렴 리더십 교육」을 실시하여 고위직 청렴의식 강화(7월, 9월)

\*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, 대면교육 불가시 실시간 화상교육(강사와 학습자 상호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) 실시 / 권익위 평가지침 반영

- (전 직원 교육) 반부패 의식 고취를 위해 전 직원이 법적 의무 교육인 부패방지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교육 추진

- (기관방문 틈새교육) 전문강사가 직접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기관 실정·특성에 맞게 청탁금지법, 행동강령 등 교육(인재개발원 협업)

- (온라인 자가학습) 청렴퀴즈, 청렴카툰 등 외부망(모바일)을 통한 청렴자가학습시스템(Clean Ocean) 콘텐츠 상시 운영(7~10월)
- \* 최근 5년간 부패관련 사례 및 외부 지적사항 등 우리부 부패 취약분야 분석을 기반으로 교육실시 계획 수립 후 교육 추진('21.5.)
- (자체 청렴교육과정 개설·운영) 우리부 및 산하기관 직원이 청렴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청렴교육과정 개설·운영
- (집합교육) 청렴실무자 과정(4월),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(7월, 9월), 기관특새 청렴교육(연중, 20회)
- (사이버교육) 청탁금지법 이해(990명), 부패 앞에 단호해지기(2,640명)
- \* 산하기관(유관기관 포함) 직원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개설 청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과 협업 및 산하기관에 적극 홍보·안내

### ③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

- (행동강령 이해도 제고) 청렴자가학습시스템(Clean Ocean) 콘텐츠에 이해충돌방지제도, 갑질금지 등 신규 도입된 행위기준\*을 포함하여 개발·교육하고 이수율은 '21년도 우리부 BSC평가(기관청렴도)에 반영
- \* 사적 이해관계 신고,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, 직무관련 영리 행위 등 금지, 가족채용 제한 등 11개 행위 기준('18.1월 이후 도입)
- (행동강령 위반행위 점검) 연말연시 등 부패행위 발생 취약시기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공직기강 점검(4회 이상)을 통한 부패예방
- 조직 내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가 보장된 익명신고 시스템(케이휘슬) 운영('21.1~12.)을 통한 소신 있는 부패신고 유도

### ④ 공공재정 환수제도 안정적 정착

- (전담조직 신설)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안정적 정착,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담당조직 지정·운영('21.5월~)

-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, 기획재정담당관실(보조금),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(R&D, 출연금 등), 운영지원과(제재부과금 부과 등) 참여를 통해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

\* 국민권익위 등 대외적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 담당부서를 감사담당관실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부처 업무협의, 공문 송·수신 등에서 혼선방지

- **(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)** 보조금, 연구개발비 및 출연금 집행실태 점검, 정기감사 등과 병행하여 3회 이상 점검\* 추진

- 허위·과다청구, 오 지급, 목적 외 사용,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(지급중단, 부정이익 등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, 명단공표 등) 등 점검

\*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, 점검 후 결과 보고 반드시 이행(실적이 없을 경우도 '실적 없음')

- **(공공재정 환수제도 정착 노력)** 권익위 합동점검 적극 참여, 부정청구 신고센터 운영('21.5.~, 홈페이지), 전담자 지정('23년 이후~)\* 추진

\* 공공재정환수법 및 제도전담(타업무와 병행불가)을 위해서는 정원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'23년도 소요정원 확보 추진('22년도 소요정원 행안부 제출완료, '21.4.1.)

## **5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 및 엄정처리**

- **(처분의 적정성 확보)**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처벌원칙 견지

- 감사처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관실 내 「감사 심의회」 개최 전 「처분적정성 검토회의」 신설

- **(신고사례 공개)**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의 처리사례에 대한 사건 내용, 조치사항, 상담내용 등을 홈페이지 또는 청렴포털에 공개(1건 이상)

- **(신고사건 엄정처리)** 신고 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,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, 산하기관 사건처리에 대해 감독 철저

- 권익위로부터 부적절 처리 사례가 통보되면 적시 조사·처리하고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사례는 이행여부 점검(2회 이상) 및 조치 완료시까지 지속 관리

### < 연간 세부추진 일정 >

추진과제	세부 추진과제	추진일정	주관부서	관련부서
1. 부패취약분야 개선	① 청렴도 취약분야 집중 개선	연중	감사, 기획재정담당관, 지방청(11)	全 부서
	② 사정기관 합동점검 및 지적사항 이행 등	연중	실국, 감사	全 부서
	③ 부패취약분야 집중관리 등	연중	실국, 소속, 감사	全 부서
2. 반부패·청렴교육 실효성 제고	① 고위급 교육	7월, 9월	인재개발원, 감사	全 부서
	② 전 직원 교육	연중	"	全 부서
	③ 자체 청렴교육과정 개설·운영	연중	"	全 부서
3.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	① 행동강령 이해도 제고	연중	감사관	全 부서
	② 행동강령 위반행위 점검	연중	"	全 부서
4. 공공재정 환수제도 안정적 정착	① 전담조직 신설	5월	감사, 운영, 기획재정,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	全 부서
	②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	연중	"	全 부서
	③ 공공재정 환수제도 정착노력	연중	"	全 부서
5.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 및 엄정처리	① 처분의 적정성 확보	연중	감사관	全 부서
	② 신고사례 공개	연중	감사, 소속기관	全 부서
	③ 신고사건 엄정처리	연중	"	全 부서

## 3. 청렴시책 성과 확산

- ◆ 반부패 시책 효과성 제고 → 기관청렴도 제고
- ◆ 반부패 중점과제 추진 → 원활한 반부패 국정과제 추진 지원
- ◆ 청렴문화 확산 활동 강화 → 민간부문 청렴수준 향상
- ◆ 반부패 정보 공개 활성화 → 대국민 신뢰 확보
- ◆ 소속 및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추진 → 우수사례 차년도 정책에 반영

### ① 반부패 시책 효과성 제고

- (내실화 및 성과 확산) 반부패 시책 수립 시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주기적 이행점검 등으로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
  - 청렴실무 협의체인 「청렴 길잡이단」, 외부전문가 자문기구인 「청렴 움부즈만」 등을 통해 추진과제 발굴 및 의견수렴 등 실시
  - 장관주재 간부회의, 차관주재 「반부패·청렴시책 추진기획단」에서 추진사항에 대하여 주기적 이행점검(7월, 9월) 실시

- (청렴활동 피드백 강화) 자체 청렴도 측정(6월) 및 소속기관 시책 평가(12월) 등을 통해 반부패·청렴도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미흡한 분야는 향후 반부패·청렴대책에 반영하여 개선 추진
  - \* 기존 청렴도 측정방식은 공정성·신뢰도가 다소 취약하고, 규제부서(지도단속, 안전 등)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어 '21년도 청렴도 측정방식 개선 추진'(21.3)
- (청렴시책 효과성 및 체감도 조사) 내부직원 및 정책고객(자문·협약·업무위탁 등)에게는 우리부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·체감도, 효과성 설문 등 자체평가 보강('21년도 자체 청렴도 측정시 조사)
  - \* '20년도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내외부 구성원의 의견이나 체감도를 제시하는 등을 통한 자체평가 보강을 권장
- (추진과제 분류체계 개선) 반부패 시책 추진의 효율적인 이행·점검을 위하여 추진전략 - 추진과제 - 세부 추진과제로 분류체계 개선
  - \* '20년도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향후 추진계획 수립시 효율적인 이행 및 점검이 가능한 추진과제-세부 추진과제 분류를 하도록 권장

## **2 반부패 중점 과제 추진**

- (자체 중점 추진과제) 실·국(소속기관)별로 도전성·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 총 48건(본부 14, 소속 34) 발굴 추진
  - 「청렴길잡이단」 실무검토, 「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기획단(차관주재)」 도전·혁신성, 실현가능성 심의, 장관주재 보고회 개최 및 확정
- (5개년 반부패)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주요과제인 갑질 근절, 공공기관 채용비리 개선, 안전분야 부패 근절 등 추진(연중)
  - (갑질 관행 근절) 상급자가 공정한 업무지시를 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'관리자 특별교육' 신설 등 교육을 강화하고,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직원 인식도 조사 및 피해사례 조사·공개
  - (채용비리 개선)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점검, 채용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(권익위 채용비리근절추진단과 협업)



- (민·관 합동 안전점검) 항만 및 어항, 여객선 및 연근해 어선 등의 재난피해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민·관 합동 안전점검\* 실시

\*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(2~4월), 취약시기 어선안전 합동점검(연 2회) 등

- (국민생활 속 불법·불공정 개선) 국민생활 속 불법 및 불공정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 추진

- (수산물 윤리적 소비) 산란기·어린물고기 보호 및 소비억제 등 윤리적 소비 등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 및 소비자 참여확대 추진

\* 치어럽 캠페인('21.4~11), 착한소비 캠페인 및 인식조사('21.6~10), 교육·홍보('21.9.)

- (낙시명예감시원) 낙시터 및 낙시어선 등에서의 불법영업, 사행 행위, 유해 낙시도구 사용, 수질오염 등을 감시·계도(100명 위촉)

\* 전국 낙시어선(4,595척), 낙시터(943개소), 유어장(161개소) 총 5,699개소('20년 기준)를 대상으로 총 1,000회(100명×10회) 활동 추진

- (국민안전 감독관 위촉) 연안여객선에 탑승하여 안전관리 이행여부 확인 및 미비점 개선·권고, 민간합동 특별점검 수행 등(15명 위촉)

### 3 청렴문화 확산 활동 강화

- (정부혁신 어벤저스 운영\*) 일하는 방식,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발굴, 세대간, 간부급과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

\* 창의적·적극적인 5급이하 직원 13명(근무경력 10년 이하, 1980년 이후 출생)으로 구성

- (청렴신호등 신설) 내부망 이용 '청렴신호등' 운영\*, 내부직원 대상 부패사건 발생, 공직기강 해이 등에 대한 경고 신호

\* 공직기강 취약시기, 청렴관련 이슈 등을 반영하여 운영

- (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) 민간부문 공정성·투명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·제도, 캠페인, 토론회, 공모전, 언론홍보(SNS 등) 등 시행

- (1기관 1실천과제)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본부 및 소속 기관별로 1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(우리부 BSC 부서평가에 반영)

- (최신 제도·행위기준 전파) 청탁금지법, 행동강령 등 최근 변화된 제도·법령 등을 산하기관, 유관단체 등에 적극 안내 및 전파

#### ④ 반부패 정보 공개 활성화

- (반부패 정보 공개) 반부패 업무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부패공직자 현황, 청렴활동, 부패·공익신고 사례 등 반부패 정보 대국민 공개
- 부패공직자 징계현황(연 2회), 청렴활동(연 10회), 신고·상담 사례(연 2회), 신고자 보호보상포상 지침(연 1회)을 청렴포털에 공개

#### ⑤ 소속 및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

- (소속기관) 소속기관(22개)에 대하여 기관별 자율적인 부패방지 시책 노력도를 평가하여 청렴 수준 향상 도모(12월)
- 청렴실천 동기 부여를 위해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금(총 600만원)을 지급하고, 주요 우수사례는 차년도 청렴대책 수립 시 활용
- (산하기관) 산하기관에 대한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 및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여 노출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자율적 반부패 개선을 유도하고, 향후 반부패시책 기초자료로 활용
- 산하기관(19개) 대상 공직복무관리계획 추진실적\*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·개인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지급(총 430만원)

\* 불합리한 제도개선, 취약분야 점검, 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청렴 지표 포함

- 권익위 청렴도 측정대상이 아닌 산하 공공기관(8개)의 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우리부에서 자체 청렴도 측정 실시

\* (대상기관) 어촌어항공단, 국립해양생물자원관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, 항로표지기술원, 해양조사협회, 해양진흥공사, 국립해양박물관, 국립해양과학관

### < 연간 세부추진 일정 >

추진과제	세부 추진과제	추진일정	주관부서	관련부서
1. 반부패 시책 효과성 제고	① 내실화 및 성과 확산	연중	실·국, 감사관	주 부서
	② 청렴활동 피드백 강화	연중	감사관	주 부서
	③ 청렴시책 효과성 및 체감도 조사	연중	감사관	주 부서
	④ 추진과제 분류체계 개선	5월	감사관	주 부서
2. 반부패 중점과제 추진	① 자체 중점 추진과제	7월, 9월	실·국, 소속, 감사관	주 부서
	② 5개년 반부패 주요과제	연중	감사관, 운영지원과, 해사안전관리과, 어선안전정책과	주 부서
	③ 국민 생활속 불법·불공정 개선	연중	수산자원정책과, 연안해운과,	주 부서
3. 청렴문화 확산 활동 강화	① 정부혁신 어벤저스 운영	연중	혁신행정담당관	주 부서
	② 청렴신호 등 신설	연중	감사관	주 부서
	③ 민간부분 청렴문화 확산	연중	실·국, 소속, 감사관	주 부서
4. 반부패 정보 공개 활성화	① 반부패 정보공개	연중	감사관, 소속	주 부서
5. 소속 및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추진	① 소속 기관	연중	감사관	주 부서
	② 산하 기관	연중	〃	주 부서

## 4. 부패방지제도 운영

- ◆ 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준수 → 신고제도 활성화
- ◆ 부패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 철저 → 엄정한 사건처리로 부패사건 예방

### ① 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준수

- 대부분의 부패·공익신고가 내부 제보자의 신고인만큼 신고자 보호규정 준수,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적조치 철저 이행
- 신고자 신분 공개·노출, 인사 상 불이익 방지 등 보호규정 준수
- 신고자 보호 조치,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 등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적조치 이행

### ② 부패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 철저

- 권익위 부패신고 이첩사건에 대해 기한 내 처리하고, 권익위로 부터 장기 미회신 이첩사건 현황 통보 시 적시 조치 후 결과 회신

- 특히, 6개월 이상 장기 미회신 이첩사건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정기 점검(상 : 1~3월, 하 : 7~8월)이 예정되어 있어 적극 대응 필요

< 연간 세부추진 일정 >

추진과제	세부 추진과제	추진일정	주관부서	관련부서
1. 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준수	① 신고자 보호	연중	감사관, 소속	소 부서
2. 부패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 철저	① 이첩사건 사후관리 강화	연중	감사관	소 부서

## V. 행정사항

### □ 소속기관별 자체 「반부패·청렴 실천계획」 수립·추진

-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「2021년도 반부패·청렴 실천 계획」을 수립\*하고 감사관실 제출 및 이행(5.31.까지)

\* 소속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를 권익위 평가지표와 연계

### □ 소속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

- 소속기관(22개)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('21.11~12) 실시하고,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부진기관 독려(12월 말)

### □ 권익위 시책평가('21.11월) 대비 이행사항 점검

-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반부패·청렴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정기·수시로 점검하는 등 이행 관리 철저
- 또한, 권익위 평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반드시 기한 내 제출(별도 통보 예정)
- 소속기관의 반부패·청렴 실천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 점검 실시(7월, 9월)